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임동욱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가 정치 쇄신이다. 국민적 여론이 차기 정부에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와 함께 과감한 정치 쇄신을 요구하면서 18대 대선 후보 '빅 3'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앞 다퉈서 정치 쇄신책을 제시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지난달 28일 '광주선언'을 통해 제시한 정치 쇄신책은 광주·전남지역 민심의 주목을 받았다. 문 후보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기득권을 허파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공천권까지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 공천과정 기대 이하

그는 이어 "민주당이 호남의 압도적 지지에 안주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 구조를 강고하게 쌓아왔다"고 지적한 뒤, "이 때문에 민주당은 호남에서 예전과 같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후보는 "지역 정치의

공천을 (서울의)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다 보니 '리모컨 자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공천제도 개혁에 나서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대안을 제시한 '광주선언'으로 문 후보는 호남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내며, 안

동구청장 보선과 광주선언

철수 후보와 단일화 국면에서 '술술한 효과'를 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광주 동구청장 보선과 광주선언 과정은 문 후보의 '광주선언'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당장, 공천 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예비후보 등록이 이뤄지면서 초반부터 논란이 접화됐다. 지난 4일 예비후보 등록 마감됐으나 공천 룰은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공천 방법 등을 둘러싸고 각종 루머가 양산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

졌다. 실제로 모 예비후보는 자신이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것도 모르고, 출마 기자회견을 하러다 취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하지만, 2차 컷-오프를 거쳐 치러지는 본 경선의 룰은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국민여론조사 70%+당원 투표 30%)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으나 30%가 반영되는 당원 투표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원 및 대의원의 직접 투표가 이뤄질 경우, 다시 한 번 '동

원 경선'의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고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천 룰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서 정책 경쟁도 사실상 실종돼 동구 유권자들은 민주당 예비 후보들에 대한 역량과 비전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마저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비 후보들이 치열한 정책 경쟁보다는 공천 룰과 관련해 중앙당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여론조사 경선을

앞두고 조지 확장에만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구지역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예비 후보자를 알아야 지지 여부를 선택할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여론조사 공천에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쇄신' 회의적 반응

민주당은 동구청장 보선선거 후보 공천에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를 70%나 반영한다는 점에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문 후보의 '광주선언'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동구청장 보선선거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의 정치 쇄신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동구청장 보선선거가 민주당에 귀책 사유가 있고,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문 후보의 광주선언이 출발점이 되는 데도 과거의 일방적인 행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과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정치 쇄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기초단체장 선거 공천에서도 현장과 소통하지 못하는 민주당이 정치 쇄신을 주도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큰 강은 작은 물줄기가 모여 이뤄진다.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문 후보의 광주선언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서울취재부장) tuim@kwangju.co.kr

시설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유치' 한목소리 내야

국립 현대미술관 분관을 광주에 유치하자는 광주시와 지역미술계의 주장이 현대 국면을 맞아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 입지를 둘러싼 논란이 무성하다. 현대미술관 유치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미술관 입지에는 시와 미술계, 그리고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강원대 시장은 12일 "전당 내에 지역미술계의 숙원인 현대미술관을 유치하도록 하겠다"면서 "미술관 입지로는 전당 내 설치가 바람직하며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도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철 아시아문화개발원장은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전당 내의 콘텐츠들 사이에 현대미술관을 끼워넣는 생각 자체가 넌센스"라며 "마치 청국장에 와사비를 섞는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당은 과거·현재·미래의 개념을 깨뜨리는 비(非) 서구적 접근 방식의 콘텐츠가 다양한 예술

품들과 뒤엉켜 새로운 개념의 예술이 세워지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현대 서구미술의 상징인 미술관이 들어서면 정체성이 모호해진다"는 주장이다. 시와 아시아문화개발원의 입장이 맞서자 지역 미술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국립 현대미술관 유치 추진위원회'가 중재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당 내 설치보다 몇 년 전 논의됐던 중앙초등학교 부지나 인근 건물을 리모델링해 구도심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문화전당의 콘텐트개발을 수립하는 문공부 산하 특수 법인이다. 따라서 문공부는 현대미술관의 유치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시와 지역 미술계도 전당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현대미술관 유치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현대미술관 논쟁'이 가뜰이나 개관이 늦어지고 있는 문화전당의 발목을 잡아서서는 안 된다.

신용불량자에게 100억대 대출해준 수협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신용불량자 100억여 원을 대출해준 단위수협 전 지점장과 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민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천문학적 대출비리가 발생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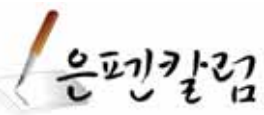
광주서부경찰은 12일 완도 소안수협 상촌지점 전 지점장 이모씨와 직원 4명, 불법 대출을 받은 임모씨 등 6명에 대해 특가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임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 등 27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모두 75차례에 걸쳐 임씨에게 107억 원의 불법 대출을 해줬고, 임씨는 현금과 차량·성접대 등 2억 원 규모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한다. 수법이 노골적이고 대담한데다 뺑뺑이 돌리다가 때로는 '막가파식' 거래를 서슴지 않았더니 놀라움 따름이다. 수협은 임씨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

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채 거래를 했다는 점이다. 또 돈을 먼저 빌려주고, 이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담보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다. 특히 임씨에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기초 수급자와 60~70대 노인 17명은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으며, 경찰에 입건까지 갔다.

그러나 단위수협 내부 통제와 수협 중앙회의 감사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완도 소안수협이 자체 감사를 하지 않은데다 2년에 한차례 수협중앙회의 감사를 받았지만 아마도 부실했다. 검은 돈 거래가 5년 동안 계속됐지만 지난 2011년 정기감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단위수협에 대한 관리·감독이 존재라도 했었던 것인지 문이 듣지 않을 수 없다. 수협은 당장 감사시스템을 강화하고, 타 단위수협에서도 불법 대출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제동 장치가 없다면 비리는 언제든 삼촌할 우산, 임씨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



이병우

김무곤 교수가 지은 'NQ로 살아라'를 보면 'NQ 18계명'이 나온다. 그 중 제1계명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이다. 지금은 힘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는 것이다.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말이다. 세상은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날 때 환호한다. 그리고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날 때는 위험하다. 국보 1호인 남대문이 전소된 것도 꺼진 줄 알았던 불씨가 살아난 탓이다. 우리의 삶도 어찌 보면 비슷하다. 얼마 전 조찬 연수회에 참석했는데 연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로 나왔던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 말이 인상 깊다. 자신이 장관으로 발탁됐을 때 관가에 도는 소문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였다고 한다. 2002년 마늘 파동 때 관직에서 물러난 후 9년째, 거의 잊혀진 이름이었던 그가 장관으로 깜짝 등장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취임 직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예수님 이래 가장 놀라운 부활"이라는 우스갯소리로 나왔다고 한다.

세시봉으로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김세환씨는 이렇게 말한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속한 세시봉에 대해 꺼진 불도 다시 보자고 말하는데 우리가 언제 꺼진 적이 있었나 싶다"라고 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지만 대중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20세기 위대한 리더로 칭송받고 있는 처칠도 한때 "꺼진 불" 신세였다. 처칠은 66세

에 전신내과의 총리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람이긴 했지만 영웅은 아니었다.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약 10년 동안 뚜렷한 직책도 없이 정계에서 완전히 떠돌이를 당한 상태로 살아갔다. 돈도 없고 정치적 동지나 지역적 기반도 없었으며 주위와 잘 어울리지도 못했다.

더구나 66세이던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때까지 그를 기억했던 사람들은 "처칠의 정치적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었다. 자신도 그리 말했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그에게는 그 시기가 '광야의 시대(wilderness years)'였다고 말한다. 총리가 됐을 때도 적지 않은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신는 코너입니다.

수의 의원들은 '처칠은 두려워할 뿐, 몇 개월만 지나면 곧 물러날 것'으로 생각했다. 오랫동안 '광야'에 있다가 자기 실현의 목표를 달성한 경우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크든 작든 자신의 비전을 세우고 끊임없이 이를 전파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처칠은 무직생활 10년간 전경공업란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히틀러의 야욕에 대해 대비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서규용 장관이나 세시봉 멤버들도 자신의 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끈기 있게 비전을 추구했기에 기회가 온 것이다. 리더가 역정에 굴복하지 않고 비전을 지켰을 경우 영항력은 더욱 커진다. 로널드 레이건은 비전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비전을 갖고 추구하는 것은 성공적인 리더십의 핵심이다. 나는 영화 세트장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서나 그 점을 확언할 수 있었다."

(광주대 신학협력단 교수)

기고



양재승

국회 출장 중의 기자 안 창가에 기대어 가을단풍이 우리 남쪽까지 물들이는 이 즈음의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어디일까'라는 궁금증이 문득 생겼다.

올해는 대선의 해인 만큼 각 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이 수도 있었고, 연말을 준비하는 기업의 주요부서일 수도 있었으나,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국회 638호 회의실이 아닐까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음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위원장 이קות은 정부 각 부처의 장차관, 전국 지자체의 관계자, 국비를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장과 예산 관계자들, 심지어 대외 총장들까지도 예결

지역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

위 소위 위원들을 설득하여 조금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설득과 투쟁의 장이 되는 것이다.

당풍이 시작될 때면 오래 정국회차가 열리는 시기이고, 정국회차는 곧 새해의 예산을 확정하는 국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급변도의 국비 확보액은 정부 반영액 기준으로 상당한 감소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변명 대신 그 대응을 인정하고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 과정에 반영하고자 박준영 도지사는 지난 3일간 국회를 방문하여 주요 상임위와 예결위장 정 등을 면담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였고, 행정 및 경제부처에서도 예결위 소위원회 기간 동안 국회에 상주하면서 실무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제는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올해가 대선의 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인 이점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

새누리당이 호남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눈앞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호남 지역의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여 호남을 배려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어차피 호남 지역을 배려하더라도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패배의식, 차별의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한다면 얼마든지 기대한 바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당도 우리의 뒷발이라는 안주된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소위 활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자기의 지역구 사업보다는 넓은 시각으로 전남의 미래를 위해 멀리보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신규사업비 반영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려서 냉동시킨 것을 들여오면 관세가 10분의 1수준인 27%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 교묘한 수법으로 들여와 잘 팔려서 팔기만 해도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중국산 냉동고추는 로또라고도 한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한가지다. 이런 게 유행인 사실을 정부가 알았으니 제대로 단속해 주길 바란다.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뒤바뀌고, 건조 후에 물을 뿌려서 냉동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행위를 발본색원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예를 들어 F1대회 운영비의 국비 지원과 자동차 부품의 고급 브랜드화 사업은 중소기업 클러스터화로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과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의 건설은 청산도 등 솔로시티 지역에 대한 중국 등 해외의 관광객 유치와 전북 등 서남해안의 주요 생산물의 물류 시스템 확보 등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의 위한 해안을 가지고 호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상생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계수조정소위 과정에서 광주와 전남을 따로 생각하는 정치적 인식으로는 아직 모든 갈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 논리적으로나 타당성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도 있음을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비 확보에 피아가 있을 수 없고, 도지사를 비롯한 전 직원들의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제는 그 중요한 역할이 정치권으로 넘어야 한다.

오로지 전남의 미래를 역동적으로 그릴 수 있는 역할이 정치권으로 넘어 온 만큼, 우리 도민 모두가 정치권에 응원의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있다.

(전남도 예산담당관)

현재 중국 고추 산지 일대에서 한국사람을 만나면 셋 중 하나는 고추를 사러 온 사람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돌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중국산 냉동고추 수입과 관련해 검색해 보니 수입 준비단계부터 고추를 구입해 현지에서 냉동시키는 방법, 검역 및 통관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적은 글이 부지기수였다.

하루속히 중국산 냉동고추의 마구잡이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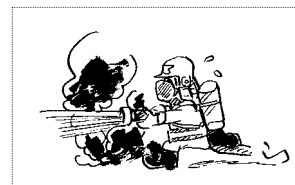
▲강석훈·광주시 남구 주월동

無等鼓

1958년 어느 늦은 밤, 미국 캔자스주 위치타(Wichita) 소방서에 인근 건물의 화재를 진압하라는 긴급 지령이 떨어졌다. 건물 안에는 3명의 아이가 갇혀 있었다.

당번인 스모키(A. W. Smokey)와 동료가 즉시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이들은 끝내 구해내지 못했다. 화염이 이미 건물 전체를 휘감고 있는데다, 창문에 설 불안감이 뒤섞인 이 시는 지난 2001년 서

소방관의 기도



자책과 안타까움에 시달리던 스모키는 며칠 후 새벽, 소방서 주 방 탁자에 앉아 정신없이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자신의 네 자녀와 또래인 세 아이를 구해내지 못한

그날 밤의 좌절과 고통의 기억이 담겨있는 시 '어느 소방관의 기도(A Fireman's Prayer)'는 이렇게 탄생했다. '제가 부름을 받을 때는/ 신이시여/ 불이 타오르는 곳 그 어디에서라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노인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구하게 하소서/ 기민하게 움직이고/ 아무리 가날뿐 외침이라도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중략)/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어야만 한다 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이와 아내를 보호해 주소서'

인명 구조에 대한 의무감과 자부심, 그리고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인 이 시는 지난 2001년 서 울 화재 중 한 명인 고(故) 김철홍 소방관의 책상에서 발견돼 많은 이의 가슴을 울렸었다.

최근 소방관 경력 25년의 김연수(54) 소방위가 인천 불투명

고의 화재를 진압하다 숨지는 등 소방관의 '애통한' 순직이 잇따르고 있다. 마냥 '신의 뜻'으로 돌리기보단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神)에 기대기보단 소방관 스스로 가족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홍행기 정치부 차장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慶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업11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F A X 222-9600> <F A X 222-950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2-9500> <F A X 227-9500>	<F A X 227-933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료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